

보 도 자 료

▶ 보도일시: 2014. 4. 15(화) 조간
 <인터넷 4. 14(월) 12:00 이후>
 ▶ 총 3쪽(보도참고자료 별도 배포)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 ✧ 공무원노사관계과 과 장 김경윤, 사무관 백영식
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과 장 양정열, 사무관 김태연
 ☎ 044-202-7650, 766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'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1천여명 정규직(무기계약직) 전환

· 앞으로 합리적 직무·보수체계 마련,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도 추진

- 정부는 4.14(월), '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과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'를 발표하였다.

· 4.11(금),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개최(고용부 차관 주재, 국조실 기재부 안행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 참여)

- 작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31,782명으로, 지난 해 발표한 「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.

< '13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>

구분	전환계획	전환실적
합계 (810개소)	30,904명	31,782명 (103%)
중앙부처 (47개소)	2,499명	3,677명 (147%)
자치단체 (246개소)	2,683명	2,756명 (103%)
공공기관 (302개소)	5,485명	5,726명 (104%)
지방공기업 (138개소)	929명	1,166명 (126%)
교육기관 (77개소)	19,308명	18,457명 (96%)

- 전환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'14년 전환예정 인원을 조기 전환하거나 고령자 등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.

· 고용부, 우정사업본부, 고양시는 취업상담원, 상시집배원, 보건소 방문 간호사 등을 '14년에 전환예정이었으나 '13년에 조기 전환
 · 대전중구,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재활용품 수거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고령자를 전환대상에 포함

- 1 -

- 한편, 정부는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공공부문 각 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처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.

- 우선, 공공부문의 전환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무부처들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, 고용부는 현장방문 및 지도를 실시하며, 두 달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.

- 나아가, 지난해 발표한 “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”에 포함된 ‘상시 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’ 관련 규정을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
- 상시·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관련 규정 주요 내용
- ▶ (전환절차) 전환대상자 선정절차, 업무실적 등에 대한 평가방법 등
 - ▶ (채용) 상시 지속업무 확대 신설 및 결원 발생시 정규직 채용 원칙
 - ▶ (평가 및 보상) 정기적인 근무평정 실시절차 및 방법 등
 - ▶ (해고)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는 해고사유 및 절차 등

- 교육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숫자가 많고 직종도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, 고용부 교육부(청)간 협력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고, 인사관리 가이드북을 마련하기로 했다.

- ▶ 실태조사 : 4~5개 시·도 교육청 소속 일부 학교를 샘플링하여 학교회계직원 각종 감사 등의 계약관행, 근로실태, 급여수준 등 조사(전문가 연구 추진)
 ▶ 인사관리가이드북 :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문가, 고용부 교육부(청) 실무진이 협의체를 구성, 학교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사관리 가이드북 마련

- 또한,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.

- ▶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표준임금테이블 마련 연구(~'14.4),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수체계 마련 및 불합리한 격차 해소 단계적 추진
 ▶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합리적 직무 보수체계 설계방안, 정원내 정규직 전환방안 등 연구, 확산('14.4~12월)

○ 아울러,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**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**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.

- 상반기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**‘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**하고, 하반기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침에 대한 **보완방안을 마련**해 나갈 계획이다.

* 주요내용: ▲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인건비 단가로 시중노임단가 적용,
▲용역계약 체결 시 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’ 조항 명시 등

□ 방하남 장관은 “우리사회에 상시 지속 업무에는 **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나가려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**”고 강조하며,

○ “작년의 성과를 거울삼아 막힌 곳은 뚫어주고 좁은 곳은 넓혀주는 마음으로 현장지도에 힘쓰는 동시에, 관계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**제도적인 보완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**”이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
공무원노사관계과, 공공기관노사관계과(☎ 044-202-7650, 7664)로 연락
주시기 바랍니다.